

“제2공항 제3의 방안도 국토부가 판단”

정세균 총리 19일 제주 방문... “국토부 고민중”
 원 지사 “대통령 약속 사항”... 정상 추진 건의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참고해 제3의 길로 가는 방안도 열려 있지만, 국토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정세균 총리는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국토부가 제주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고 도민 여론 조사 결과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제주지사와 도의회간 단일안도 마련되지 않는 등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차원에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 계획은 없고 국토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길 바라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제주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참고해 제3의 길로 가는 방안도 열려 있지만, 강정마을 사태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 총리와의 환담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 건의문’을 전달했다. 원지사는 “대통령과 정부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자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제주4·평화공원을 찾아 현화·분향한 뒤 4·3유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정 4·3특별법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 등이 포함돼 있어 유족들의 아픔을 일부나마 이루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을 개정 후속 조치가 차질 없도록 유족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 개최 후 이튿날인 20일 제주탐라 해상풍력단지 방문해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등을 통해 태양·바람·수소가 아우러진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추진중”이라며 “정부는 풍력발전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풍력발전 원스톱사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에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예방. 환담을 나누고 있다.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첫 문턱 넘어

제주지원위, 19일 12년만에 제주서 회의 심의·의결
 개정안 반영 후 국무회의·입법절차 거쳐 국회 제출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지난 1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강섭 법제처장, 문체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7명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

했다.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도입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 ▷외국인 무사증입국 일시정지·해제 요청권 ▷자치재정 확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명령 등이 들어가 있다.

정 총리는 “오늘 심의한 과제들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을 아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과 제인 국제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경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고대로그 기자

제주 분권 모델 완성 과제 지속 추진

자치분권위, 19일 2021 자치분권 시행계획 공개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들이 반영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중점 추진할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2020년 완료된 과제 1개를 제외한 32개 추진과제와 102개 단위 과제(2019년 완료 16개, 2020년 완료 15개 단위과제 제외)가 담겼다. 시행계획의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에 이어 중앙행정관할 이양·특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및 제주형 자치모델

의 완성을 위한 과제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연내 7단계 제도개선안 입법(제주특별법 개정)과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과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와 과제도 담겼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은 최근 발표된 2020년도 이행상황 평가에서 ‘보통’의 성적을 받았고, 올해 시행계획에 다시 포함됐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성산일출봉’ 해저 비밀 밝힌다

도, 해저지질 조사·가치 발굴 연구용역 공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바다 속의 비밀을 밝힐 연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 해저지질 조사 및 가치 발굴 연구 용역’을 지난 20일 공고했다. 예산은 5억원이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다.

연구 대상은 성산일출봉 해안선에서 3km까지의 인근 해저다. 연구를 통해 정밀 해저 지형 탐사와 해저 지층 탐사, 해저 표층 퇴적물 분석, 보존·관리·홍보방안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간 성산일출봉 지상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이뤄져 왔지만 해저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바닷속 연장 범위를 파악, 자연유산 완전체의 실체와 형성 과정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주변 해저환경 특성에 기초한 해안지역 자연유산의 종합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해저 지층 탐사를 위해 탄성

파 지층탐사기를 이용, 해저 최상층 단면을 획득하고 해상 시추를 통한 지하 지질과 층서 특성 분석도 진행된다. 또 성산일출봉 응회암층의 분포 범위와 분출 초기 일출봉 응회구 지형의 형성사를 복원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일출봉 해저 지질 안내판 문구 초안을 작성하고 성산일출봉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활용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대로그 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세상을 바꾸는 중심!”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도의 제주제2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4만여 전문건설인과 함께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백상훈 외 회원사 일동